

잇단 폭로에 의혹 확산... 정치권 흔들는 명태균의 '입'

김 여사와 카톡·여론조사 조작 정황... "철없이 떠드는 오빠" 대화 논란 대통령실 "친오빠" 해명, 국힘 "거짓이면 신뢰 잃어"...명, 추가 폭로 예고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의 연이은 폭로와 관련 의혹이 확산하면서 여론 내부도 술렁이고 있다. 특히 명씨와 김 여사가 나눈 카카오톡 등이 여과 없이 공개된 이후 여론 내 우려가 깊어지는 모습이다.

명씨가 지난 15일 페이스북에 공개한 김 여사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에 따르면 김 여사가 명씨에게 "철없이 떠드는 우리 오빠 용서해주세요"라는 카카오톡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오빠'가 윤석열 대통령이 아닌 김 여사의 친오빠라며 사적 대화일 뿐이었다고 해명했지만,

친오빠 해명을 둘러싼 논란은 여전하다. 명씨는 이후 한 언론사 기자와 만나 자신이 공개한 김 여사와의 카톡 대화를 거론하며 "내가 알기로는 그런 것 한 2000장은 된다. 여사, 대통령 다 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야당이 폭로를 이어가는 명씨를 김 여사의 국정 개입 고리로 연결 짓고 있는데, 명씨가 윤 대통령 부부와 나눈 대화를 추가로 공개하겠다고 예고하면서 여당 내 우려도 점차 커지는 모습이다.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16일 MBC 라디오에서 "친오빠였다고 하더라도 석연치 않다"며 "대

통령실 설명이 사실이기 바라는 만약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면 신뢰가 완전히 무너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은 채널A 유튜브 브이노와 "내가 들은 정보에 의하면 친오빠가 맞는 것 같다"면서도 "오빠가 대통령이나, 친오빠라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다. 친오빠는 왜 그런 판에 끼는 것이고, 왜 명씨랑 접촉하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친윤(친윤석열)계 강명구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오빠가 누구인지 중요한가, 대통령실의 해명이 맞는다고 본다"고 옹호했다.

장예찬 전 청년최고위원은 CBS 라디오에서 '김 여사가 윤 대통령을 오빠라고 한 것을 들어본 적 있는가'라는 질문에 "그렇게 호칭하는 것은 들어본 적 없다"고 답했다.

추가로 드러난 명씨의 여론조사 조작 정황도 당내에서 우려 섞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대목이다.

한 언론은 지난 15일 명씨가 지난 대선 경선 과정에서 당시 후보였던 윤 대통령에게 유리하도록 여론조사를 조작한 정황이 담겼으며 녹취록을 공개하기도 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명씨는 여론조사 실무자인 강해경씨에게 "윤석열(대통령)이름 좀 올려 갖고 흥준표(현 대구시장)보다 한 2% 앞서게 해주소서"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명씨 관련 의혹에 대해 원칙적으로 당이 아닌 대통령실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보고 있지만, 지난 대선 경선 당시 명씨가 당원 명부를 입수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신속하게 진상을 밝혀야 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당시 4명의 경선 후보 캠프는 명씨가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여론조사 업체 미래한국연구소와 공식 계약을 맺고 여론조사를 수행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비공식 여론조사가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다.

서법수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명씨는 일반당원으로 확인됐고, 조사를 위한 당무감사위원회를 조만간 구성할 것"이라며 "조사 결과 수사가 필요하다면 (수사당국에) 넘길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또 여론조사 조작을 막기 위한 '명태균 방지법'도 검토하고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지난 14일 최고위원회 사전회의에서 명태균 방지법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野 '김 여사와 오빠·명태균' 증인 채택

다음달 1일 대통령실 국감

야당이 16일 단독으로 김건희 여사와 오빠 등을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 일반증인·참고인으로 채택했다.

이날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증인·참고인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신청한 33명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 등 야당의 일방적 의



국민의힘 간사인 배준영 의원(가운데)이 증인 채택 관련,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야당 간사인 박성준 의원에게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진행에 반발하며 의결 전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민주당은 김 여사를 다음 달 1일 열리는 대통령실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하면서 그 이유로 '대통령실 총선 공천 개입, 명품가방 수수사건, 도이치모터스 추가조작 사건, 대통령 관저 공사 수수 의혹 등 관련'이라고 설명했다.

또 김 여사의 친오빠인 진우 씨는 '대통령실 출입 및 회의 참석 의혹' 및 '친인척 국정개입 의혹 관련' 명목으로 증인 명단에 올랐다.

민주당은 대통령실 총선 공천 및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는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강해경 씨, 김대남 전 서울보통보형 상근감사위원, 이원모 대통령실 인사비서관, 황중호 행정관 등도 증인으로 불렀다.

김 여사는 법제사법위원회 국감 증인 명단에도 올랐다. 또 김 전 의원과 명 씨, 강 씨는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증인 명단에도 포함됐다.

도이치모터스 추가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인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대표, 이종호 전 블랙인베스트먼트 대표를 비롯해 김 여사 계좌 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정필 씨 등도 증인 명단에 들어갔다.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에 대해서도 이전 당시 경호처장이었던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해 관저 이전 업무를 총괄했던 김오전 전 국토교통부 차관, 김태영 21그램 대표 등 공사에 참여한 업체 관계자 5명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민주, '국감 중 골프' 민형배 의원 윤리심판원 회부

더불어민주당은 16일 민형배 의원이 국정감사 기간 중 골프를 쳤다는 보도와 관련해 민 의원을 윤리심판원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공보국은 이날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이재명 대표는 민 의원에게 엄중 경고하고 윤리심판원에 회부해 조사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국정감사 기간이자 10·16 재보궐 선

거운동 기간이던 지난 13일 지인들과 골프 모임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후보들의 약정으로 치열한 '경합'을 벌이던 영광군수 재선거에 당 지도부들이 총출동하는 등 총력을 기울였던 상황이라는 점에서 당내에서도 비판의 여론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과 새미래민주당은 이

날 일제히 논평을 내고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국민의힘 광주시당은 "국정감사보다 중요한 대기업 임원들과 골프 라운딩"이라며 "국회의원이 국정감사를 준비해야 할 시기에 대기업 임원들과 골프장에서 만났다면 의심의 눈길이 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새미래민주당 광주시당은 "국정감사를 바로 앞에 두고 골프장에서 대기업 임원들과 라운딩하고 있는 민형배 의원을 보며 광주시민들의 울분이 치밀어오른다"고 비판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국감 현장

이재호 "외국인 부정수급에 건보 재정 손실 심각"

최근 5년간 외국인들이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부정수급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악용한 사례가 1만 6000건, 5억 68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이재호(담양·함평·영광·장성) 국회의원은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외국인 건강보험 부정수급 사건들로 국민건강보험 재정 손실과 의료 자원의 낭비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확인을 의무화하는 제도를 도입했으나, 부정수급과 관련한 징수 및 처벌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실제 외국인 명의의 도용자는 대부분 소재 파악이 어려운 무자격자이며, 수사기관에 고발되더라도

수사가 중단되거나 실효적인 징수가 어려운 경우가 많고 도용자가 출국하거나 소재 불분명해 징수 자체가 불가능한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최근 5년간 발생한 1만6000건의 부정수급 사례 중 처벌이 이루어진 경우는 단 49건(0.31%)에 불과하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관계 당국은 외국인의 건강보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부정수급과 관련한 징수와 처벌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신고와 포상 같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서삼석 "헬기 계약 무산에 산불 진화 공백 우려"

산림청이 산림재난 대처를 위해 '대형헬기 구매'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헬기 제작사와의 계약 문제 등으로 장비 도입이 지연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영암·무안·신안) 국회의원이 16일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대형헬기 제작사와의 공문 일체' 자료에 따르면 산림청은 대형헬기 제작사로부터 일방적으로 계약 파기 통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산림청은 대형 산불 진화에 효과적인 대형헬기 구매를 위해 3개년 계획으로 예산 550억원을 확보하기로 하고 사업 2년째인 2024년까지 385억원을 반영했으나, 지난 7월 헬기 제작사인 에릭슨측으로부터 계약 종료 공문을 통보받았다.

제작사는 미국연방항공국으로부터 제폭렬 세부 인증계획을 승인받아야 하는데 6개월 이상 처리되지 않았으며, '불기향력 및 불가능으로 인한 계약

종료'를 계약 해지 사유로 제시했다.

결국 대형헬기 공급 지연으로, 산림청의 재난 대응 체계 구축 계획에도 비상이 걸렸다.

앞선데 뒤틀린 것으로 현재 국내에서 소방헬기로 사용 중인 러시아산 중형 헬기(Ka-32) 29대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부품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다, 내구연한 임박으로 오는 2030년이면 사용 제한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올해 대형헬기 3대, 중형헬기 3대 확보하는 한편 공군의 고정익 항공기(동체에 날개가 고정돼 있는 항공기)를 인차해 물탱크를 부착하는 예산을 편성했지만, 공군과 협의 없이 진행한 탓에 결국 무산됐다.

/오광록 기자 kroh@



건물·주택 지붕공사, 스틸방수, 리모델링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칼라강판 지붕공사

건물 리모델링

전원주택신축

공장신축

옥상스틸방수

주택(외, 내부) 리모델링

징크판넬시공

창호(샷시)교체

모던건설 사무실 광주시 북구 자미로45(신안동)
공 창 광주시 서구 서창2길3(서창동)

시공문의 전상하 T. 062)531-3530, H. 010-9229-3530